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배영애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학 통일교육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들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우리 구성원 중에서 20대인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해서 당위성보다는 실리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학 통일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대학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에서 두 가지 영역 어디에서도 교육 대상으로서 위치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의 위상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 통일교육은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의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제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 사람, 생활세계의 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과 교육 콘텐츠 개발, 북한·통일관련 강좌 개설을 운영하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확립과 다양하고 현실적인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통일교육, 대학 통일교육, 현황, 개선방향,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화.

I. 서론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분단 체제는 대립과 갈등,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등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를 낳고, 이로 인해 민족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한의 이질화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민족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총체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편익의 창출,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하다.¹⁾ 하지만 통일은 몇몇 소수의 관심만으로 불가능한 민족적 과제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여야 할 사안이다.

이런 통일에 대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동안 남북한 분단구조는 더욱 고착화되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점점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젊은 연령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20대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 통일의식조사』²⁾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전체 연령에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1.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도와 비교하여 4.9%가 감소

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p. 15~17.

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2007년부터 매년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7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 수치다. 특히 연령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2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률이 2014년 43.1%에서 2015년 30.7%로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또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 연령대 설문 결과에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 40.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남북 간 전쟁위협 해소’가 26.2%, ‘선진국으로 도약’이 14.0%, ‘북한주민 삶의 개선’이 6.2%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20대의 경우는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통일이후 실질적인 변화에 더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물론 20대가 모두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생의 대부분이 20대라는 점에서,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20대와 대학생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20대인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당위적 인식보다는 실리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단 이후 70년 동안 세대가 변화하면서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곧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년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 20.

4) 위의 글, pp. 21~22.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에는 통일 관련 교과가 배정되어 있고, 통일교육시범학교가 운영되어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사회인의 중간위치인 대학생들은 학교와 사회로 구분되는 통일교육 체계 내에서 어디에도 분명한 위치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에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은 경쟁과 시장논리에 의해 구조가 재편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대학 통일교육은 체계성과 내실화가 미흡한 수준을 넘어 매우 우려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검토하며,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현황과 한계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대학 통일교육의 지속과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중심세대이자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저조했던 대학 통일교육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검토를 포함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칭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하고,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대학 통일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대학 통일교육에 관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통일인식 저하와 대학생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다. 변중헌(2012), 이미경(201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통일외식 조사를 통해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외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현재까지 무관심했던 대학생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학생에 대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⁵⁾

둘째,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전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홍용희(2012), 정경환(2012)의 연구에서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전제로 평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통일환경으로 인하여 대학 통일교육이 소극적인 분단 차원의 넘어 통일 전후의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학 통일교육의 현재의 상황과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방향에 대한 구체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⁶⁾

셋째,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김종수(2015)와 조은희(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은 몇몇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양에서 개설된 과목들의 경우 제한적인 계열의 학생들만이 접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⁷⁾ 김종수(2015)는 대학

5) 변중헌, “20대 통일외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p. 157~186; 이미경, “대학생 통일외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2014), pp. 175~195.

6) 홍용희, “대학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윤리문화연구』, 제8호 (2012), pp. 35~50; 정경환,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전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3권 제4호 (2013), pp. 171~200.

7) 김종수,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5), pp. 103-130; 조은희, “대학생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광복70주년 통일교육이 미래다』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5), pp. 107~141.

통일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학생들이 시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조은희(2016)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 교양과목 사례를 통해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최근 대학 통일교육 관련 방향이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다양한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대학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이나 대안과 방법이 대부분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으로 특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내용과 방법, 법적·제도적 측면을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학 통일교육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통일교육의 성격과 범위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다시 말하면 통일교육은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과 통일의 과정, 통일의 상황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 사고능력 및 제반 행위규범과 절차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교육과

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 통합용』(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 6.

더불어 통일 이후의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가치관 및 태도, 의지 함양을 위한 통합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통일교육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가진 사회 통일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초·중등학교의 학생과 대학생이 해당되며,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은 정부의 방향대로 교육과정에서 교과시간 및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등 교육활동을 활용해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고등교육인 대학은 학교 설립·운영자의 이념에 따라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의 운영에 있어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강의 개설이나 관련 기관운영 등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고등교육에서도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 통일교육은 학교 밖의 사회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통일부)의 지원 하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상은 모두 성인들이며, 연령대와 성별,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기관으로는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협의회에 가입한 기관 및 단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대학생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통일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성인이기 때문에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도 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이기 때문에 교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및 통일 관련 전공 및 교양수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이 되지만, 사회

통일교육 기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생의 통일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비형식적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통일부의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 사업은 대상이 대학생, 대학 안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연구소, 대학 내의 통일 관련 동아리 등이 포함되어 대학 내의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대학 통일교육의 의의

대학은 학문적 견지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지적 공간이자 공동체이다. 오늘날 대학은 복잡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관심을 넘어 그 대안과 해법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⁹⁾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 연구와 지식 생산을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을 확립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 살아남는 방법을 잘 터득해야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경영기관으로 변해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¹⁰⁾

대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은 시대의 역류와 역행에 동조하고 순응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영어식 표현이 ‘University’는 보편적(universal)이라는 말이 변한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주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혹은 “모든 사람에게 의해 승인되고, 모든 것에 통용되고, 모든 것에 타당한 것”을 의미한

9) 변종현,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 161.

10) 김철, “대학의 이념과 21세기의 대학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1호 (2006), p. 20.

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은 현재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체계를 갖추고 역사적 사명을 추구해야 한다.¹¹⁾

대학은 국가란 무엇인가, 국제질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의 문제 제기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제공해준다. 유동적인 세계질서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해 준다. 다음으로 대학은 구성원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철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삶에 대한 철학은 자신에 대한 주체적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은 학문적 탐구 이외에 복잡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관심을 넘어 그 대안과 해법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본연의 진리 탐구 이외에 남북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해결을 제시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적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¹²⁾

특히 연령상 20대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남북한 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한 주체적 관심이 다른 어떠한 세대보다 대학 시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남북한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중심세대라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이들의 관심과 참여는 통일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 목표와 방향은 대학 통일교육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이에 더 나아가 대학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대학 통일교육은 기여할 수 있다.

11) 정경환, “대학통일교육의 기본전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3권 제4호 (2013), p. 176.

12) 위의 글, p. 160.

Ⅲ.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

1. 대학 내에서의 통일교육의 현황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1968년에 최초로 시작되었다. 각 대학에 ‘국민윤리’ 과목을 채택을 권장하였고, 1970년에는 각 대학에 ‘국민윤리’ 교과목을 필수과목(2학점)으로 지정하여 1988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되었다. ‘국민윤리’가 필수교양 과목으로서 행해지던 시기 대학 통일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이념교육과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교육이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대학 통일교육은 반공과 안보교육의 성격이 강하여 통일교육의 목표인 통일 대비 교육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9년 이후 ‘국민윤리’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전환되어 개설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¹³⁾ 이후 대학 통일교육은 북한학과, 윤리교육과, 정치외교학과, 군사학과, 국제관계학과 등 일부 전공교과와 교양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1) 북한학과 및 통일 관련 학부 개설을 통한 교육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과 탈냉전 등 통일 환경의 변화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통일대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대학에서 북한학과 설립이 추진되었고, 1994년 동국대를 최초 시작으로 1995년 명지대, 1996년 관동대, 1997년 고려대, 1998년 조선대와 선문대에 북한학

¹³⁾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통일연구원, 1997), pp. 55-56;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2014), p. 181.

과가 개설되었고, 2001년 인제대학에 통일학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대부분 설립된 북한학과는 졸업생들의 관련 직종 취업난과 신입생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6년 현재 대부분의 북한학과는 폐지나 다른 유사학과와의 통·폐합 등으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인제대학교 등 3개 대학만이 북한학과 및 통일학부를 운영하고 있다.¹⁴⁾ 2017년 3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는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로 개편하여 동국대 북한학과와 인제대학의 통일학부만이 존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학 자체의 관심이 부족했으며, 통일 준비를 위한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지속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표 1>는 현재 전국 대학의 북한학과와 신설·폐지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 1> 북한학과 신설·폐지 현황(2016년 12월 기준)

순서	학교	설립	현황
1	동국대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40→20) • 2013년 입학 정원 축소(20→15)
2	명지대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정치외교학과로 통폐합
3	관동대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폐지
4	고려대(세종)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통일외교학부로 개편
5	선문대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동북아학과로 개편 • 2015년 글로벌한국학과로 통폐합
6	조선대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폐지
7	인제대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설계학부 중 하나로 통일학부(연계전공 및 부전공 형태로 운영)

*출처: 『세계일보』, 2016년 4월 2일자(를 참조하여 수정함).

14) 『데일리 NK』, 2011년 4월 11일; 『중앙일보』, 2016년 1월 4일.

2) 학과의 전공 교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

전국 4년제 대학은 현재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222개¹⁵⁾이며, 위의 북한학과를 제외한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을 전공필수 및 선택으로 개설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은 총 104개이다.¹⁶⁾ 이 대학들 중에 현재 43개의 정치(외교) 관련학과¹⁷⁾에서 북한·통일관련 과목을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 순으로 27개 대학의 윤리교육/윤리관련 학과¹⁸⁾, 18개 대학의 군사학과와 사관학교¹⁹⁾, 5개 대학의 국제관계학과/국제관계학부²⁰⁾, 2개 대학의 사회학과²¹⁾, 2개 대학의 경제학부/경제학과²²⁾, 2개 대학의 지

15) 전국대학기획자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ucpa.or.kr/> (검색일자: 2016.12.4)
1995년에 창립하여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이 회원교로 가입되어 있다.

16) 전국 4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들의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17)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배재대, 부경대, 부경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인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남대, 전북대, 전북대, 제주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41개 대학의 정치외교학과에서 개설하고 있고, 청주대는 정치안보국제학과, 한림대는 정치행정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다.

18) 15개의 사범대(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대, 서원대, 성신여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10개의 교육대학교/교육대학(공주교대, 광주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제주대 교육대학,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윤리교육과(초등교육과), 2개의 윤리문화학과(동국대, 동아대)에서 개설하고 있다.

19) 14개 대학의 건양대, 경남대, 경운대, 대전대, 단국대, 동신대, 상명대, 서경대, 우석대, 용인대, 영남대, 조선대, 초당대, 청주대의 군사학과 4개의 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등이다.

20) 경기대, 대구대, 서울시립대, 신라대, 창원대 등 국제학과와 국제학부에서 개설하고 있다.

21) 경북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다.

22) 건국대 경제학과, 부경대 경제학부에서 개설하고 있다.

리 관련 학과²³⁾, 2개 대학의 국사학과, 2개 대학의 농생명과학대학/농업 자원학과²⁴⁾, 2개 대학의 역사학과²⁵⁾, 1개 대학의 법 관련 학과²⁶⁾ 등이다. 그 중에서 전공필수로 운영되고 있는 학과는 모든 윤리교육/윤리관련 학과와 소수의 정치(외교) 관련 학과이며, 나머지 대학은 학과의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통일 관련 전공 개설 대학과 학과의 교과목을 분류한 내용은 아래의 <표 2>과 같다.

<표 2> 전국 4년제 대학 북한·통일관련 전공 교과목 개설현황(2016년 12월 기준)

대학 숫자	관련 학과	전공필수 및 선택 교과목
43	정치외교학과/ 정치안보국제학과/ 정치행정학과	국제정치와 남북한관계, 남북한 관계의 이해, 남북한관계론, 남북한 정치론, 북한과 동북아, 북한과 한반도 정치, 북한문제와 통일 북한의 이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북한의 정치와 대외관계, 북한정치, 북한정치경제, 북한정치론, 북한의 정치와 대외정책, 북한의 정치와 문화, 북한의 정치와 사회, 북한정치와 사회, 북한정치외교론, 북한정치의 이해, 북한정치이론, 북한정치특강, 분단국통일론, 분단체제와 통합, 통일문제연구, 통일한반도의 미래상, 한국분단사, 한국의 안보와 통일, 현대북한의 정치
27	윤리교육과/윤리문화학과/ 초등교육과	남북한 사상비교, 남북한사회연구, 남북한과 통일교육, 남북한관계, 남북한 통합 및 체제비교,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 북한과 통일론, 북한 및 통일교육, 북한문제의 이해, 북한사회와 교육의 이해, 북한사회론, 북한사회와 문화, 북한사회문화론, 북한사회문화연구, 북한사회연구, 북한사

23) 강원대 지리교육과, 경북대 지리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다.

24) 강원대 농업자원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다.

25) 고려대 한국사학과, 한신대 국사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다.

26) 국민대 공법학, 기업융합법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다.

		회의 이해, 북한연구, 북한의 이해, 북한 정치, 북한정치론, 북한정치사회론, 북한 정치이해, 초등통일교육론, 통일과 민족 문화, 통일교육, 통일교육론, 통일문제연구, 평화통일론,
18	군사학과/사관학교	북한군사론, 북한의 군사, 북한 군사학, 북한학
5	국제관계학과/국제학부	남북한 통일문제 세미나, 남북한관계, 남북한관계론, 북한문제세미나, 북한사회와 남북통일,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역사와 문화, 북한의 정치와 사회, 현대북한의 이해
2	사회학과	북한사회론,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2	경제학과/경제학부	북한사회경제
2	지리학과/지리교육과	북한지리, 북한지리교육
2	국사학과/한국사학과	북한사의 이해, 북한의 역사, 북한의 한국사 연구동향
2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북한농업, 남북한 농업발전론
1	공법학/기업융합법학과	북한법, 통일과 법
104		

*출처: 송실평화통일연구원, 『대학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송실평화통일연구원, 2015), pp. 98-103 참조와 전국 4년제 대학 관련학과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참조하여 재수정하였음.

위의 <표 2>에서 북한·통일 관련 전공 교과목을 내용별 비중을 분류해 보면 정치·외교 관련 교과목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 사회문화, 경제영역, 통일 및 기타영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폭넓은 대학 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의 다양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교양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북한과 통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는 총 79개 대학이다. 그 중에서 교양필수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숭실대학이 유일하며, 2014년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1학점 형태의 교양필수 과목을 개설하여 14학번 신입생부터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운영되고 있다.²⁷⁾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교양선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79개 대학 중에서 50개 대학은 단 1개의 북한·통일 관련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24개 대학은 2개의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경남대, 고려대, 대진대, 서울대, 순천대 등 5개 대학은 3개 이상의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교양과목 대부분이 『남북분단과 통일』, 『북한학』, 『북한학개론』, 『북한사회의 이해』, 『북한의 이해』, 『북한 정치와 사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이다. 교양과목은 전공과목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 등 개괄적인 이해를 강의목표로 하고 있다.

2.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 지원 사업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 지원 사업은 통일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과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위탁을 통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먼저 통일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사업으로 1982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오래 지속하고 있다. 대학생과 대학원

27) 조은희, “대학생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광복70주년 통일교육이 미래다』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5), p. 60.

28)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대학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2015), pp. 98-103 참조와 관련 학과 홈페이지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재수정함.

생이 통일문제를 주제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제34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44편의 응모작 중에서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3편, 입선 5편을 선정 시상하였다. 2015년부터 논문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통일홍보 공익광고(CF) 공모’를 새롭게 실시하여 11편의 공익광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5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²⁹⁾

2016년 처음으로 통일부에서 새로운 대학 통일교육 사업인 ‘통일교육 선도대학’은 대학 차원의 통일교육 모델 개발과 대학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육대학을 6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통일부는 6개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선정기준은 통일교육 추진여건, 통일교육 운영계획,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별 형평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³⁰⁾ 이들 대학은 학교별 사업계획과 규모에 따라 총 18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각각 차등 지원받게 되고, 2년간 사업진행 후 중간평가를 통해 2년의 추가 지원을 받는 형태이다. 또한 2016년 처음으로 12개의 대학³¹⁾의 ‘옴니버스 특강’(33회 특강, 현장학습)과 ‘통일·북한 강좌’ 지원에 21개 대학의 24개 강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³²⁾

두 번째, 통일부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를 통한 위탁사업으로 아카데미 형식이며, 대학 통일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75개 대학, 82개 대학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협의체이며,

29) 통일부, 『2016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16), p. 214.

30) 2016년 3월 18일 통일부 보도자료 참조.

31) 옴니버스 특강 대학은 경남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대, 동아대, 숙명여대, 시립대, 우석대, 인하대, 중앙대, 한남대 등 12개이다.

32) 2016년 6월 21일 통일부 보도자료 참조.

전국 대학의 통일·북한 관련 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국제관계학과 등 전공 관련 학과가 운영하는 연구소가 거의 대부분이다.³³⁾ 매년 통일부가 이 협의회에 위탁을 통해 사업자 공모를 하며, 사업대학을 선정하여 대학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통일부의 지원으로 협의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은 <표 3>와 같이 통일포럼, 통일아카데미, 전국 대학생 통일 토론대회, 대학생 통일동아리 지원이다.

<표 3>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의 대학 통일교육 사업 선정 결과(2015년)

사업명	선정대학
통일아카데미(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북한통일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통일포럼(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통일교육센터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충남대학교 평화안보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전국대학생 통일토론대회(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대학교 평화교육연구소,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대학생 통일동아리(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대학생통일북한연구회), 강원대학교(하나로) ●경북대학교(디딤돌), 동남보건대학교(통일준비 여성건강증진 연구동아리) ●서강대학교(우리하나), 서울대학교(한반도문제연구회) ●숭실대학교(봄), 영남대학교(U.C.C)

*출처: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aurinu.or.kr/> (검색일자: 2016.12.4) 참조하여 작성함.

대학에서 통일담론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생 ‘통일아카데미’와 ‘통일포럼’을 지원하고 있다.

33)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aurinu.or.kr/> (검색일자: 2016.12.4).

‘통일아카데미’와 ‘통일포럼’은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의 확장 및 통일정책의 이해, 통일방안 창출 등을 위해 지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5년에 ‘통일아카데미’는 2개 대학에서 통일환경·남북관계·북한실상·통일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통일포럼’은 전국 7개 대학교에서 전문가 특강과 세미나 형태로 교수·전문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사회 통일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처음 시행되어 5개 대학의 통일동아리를 지원했고, 2015년에는 8개 대학에 통일동아리를 지원하였다.³⁴⁾

2. 대학 통일교육의 한계

1) 대학 내에서의 통일교육의 한계

대학 통일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학 통일교육은 교육 기회와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222개 대학 중에서 104개 대학의 북한학과 또는 정치(외교)학과나 국제관계학과, 윤리교육과, 군사학과 등에서 개설되는 전공필수 및 선택 교과목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정된 소수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교양과목으로 북한과 통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는 총 79개 대학이며, 북한·관련 교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학교는 물론 1년에 한 강좌 밖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교양강좌 개설 현황이나 강좌수가 많지 않고, 인문·사회과학대학 중심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된 관심 있는 소수의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에게는 수강할 기회가 있지만, 자연계열과 이공

³⁴⁾ 통일부, 『2016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16), p. 214.

계, 예체능계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는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학 내 통일교육은 북한·통일 관련 전공학생이나 관심이 있는 일부 학생들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각 대학 개설되어 있는 북한·통일 교과목 현황을 보면, 교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내용이 단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치·외교 관련 교과목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 사회문화, 경제영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북한·통일교육을 정치외교학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한 관련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도 정치학 전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³⁵⁾ 그렇다 보니 담당교수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 교육내용과 교육효과의 우려도 제기되며, 통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북한에 대한 관점도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교양선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50개 대학은 1개의 교양 교과목으로 북한학, 북한의 이해, 북한사회의 이해, 북한의 정치 등으로 그 교과내용의 선택이 매우 제한적·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과과정마저도 매우 부족한 것이 대학의 현실이다. 대부분 교과들이 개괄적이거나 총론적이며, 체제와 이념적인 부분에 국한되고 있어 교과내용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대학의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의 대부분은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이 용이한 강의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³⁶⁾ 강의식 교수법은 학습자의 지식 필요 욕구와 교수자의 전문적 역량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효율적인 지식 전달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통일교육 교육방

35) 이경태, “바람직한 대학 통일교육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1권 3호 (2004), pp. 253~254.

36)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2014), p. 180.

법이 대부분 강의식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통일교육의 목적인 실천능력 제고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학 내 관련 교과목이 제한적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루어야 할 개괄적인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의식 교육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담당교수의 전공과 관심분야, 이념적 성향 등에 의해서 강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나 입장이 논의되지 못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발표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으로는 수준이 다양한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여 교육생으로 하여금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이해와 보편적인 입장을 정립보다는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혼란의 우려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 지원의 한계

(1) 대학 통일교육 위상의 미약

통일교육은 헌법 제4조³⁷⁾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

37) 통일교육의 목표는 헌법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육이지만, 통일교육 체계 내에서 대학생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통일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통일교육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가진 사회 통일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통일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성인이기 때문에 사회 통일교육의 대상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은 학교 통일교육이나 사회 통일교육 영역 모두에서 교육 대상으로 명확한 위치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교육에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으로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근거로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⁸⁾ 3항은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대학도 진흥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대학생도 학교 통일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통일교육 지침서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해당 대학교와 과목을 개설과 운용은 담당교수의 의지에 달려 있다.

3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 통합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 6.

또한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002년부터 통일교육의 지도방향과 내용체계 등을 제시한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과 『통일교육지침서: 일반용』의 두 가지로 분류해서 발간하고 있다.³⁹⁾ 그러나 학교용과 일반용의 『통일교육지침서』 모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침이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다.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과 『통일교육지침서: 일반용』을 통합한 2016년 『통일교육지침서: 통합용』에도 대학생이라는 단어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대학생은 학교 통일교육의 주요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회 통일교육에서도 교육 대상으로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대학 통일교육의 위상 또한 상당히 미약하고,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 지원의 한계

현재까지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사업 내용이 단순하고 예산도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연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위탁을 통한 통일아카데미, 통일포럼, 전국 대학생 통일 토론대회, 대학생 통일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들이다. 참고로 2015년 대학 통일교육 지원 예산은 총 2억 2천 7백만 원으로,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사업에 9천 7백만 원을 제외하면 협의회 위탁 예산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1억 3천만 원이다. 2016년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 지원 사업 총 예산은 30억 원 상당이고,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9천만 원, ‘통일교육 선도대학’ 18억 원, ‘대학 옴니버스 및 통일·북한강좌 개설 지원’ 10억 원,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위탁을 통한 사업(통일포럼 등)에는 약 1

³⁹⁾ 학교용과 일반용의 『통일교육지침서』는 그 내용 구성상에 있어서 기본원칙 등의 개괄적인 방향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학교용은 교과목을 고려한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억 3천만 원이다.⁴⁰⁾ 2015, 2016년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위탁사업의 예산 모두 1억 3천만 원으로 통일부의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며, 그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대학생들도 소수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사업으로 1982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오래 지속되었고, 대학(원)생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참여 논문들의 주제는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방안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내용이다. 논문 현상공모 입상자들의 학과를 보면 대부분이 정치외교, 경제, 법학과 등 대학에서 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과나 인문, 사회계열이 다수이다. 그렇다보니 참여하는 학과들도 소수이고, 참여 대학도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응모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해외 연수 기회가 없어지는 2013년부터 61편, 2014년 46편, 2015년 44편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⁴¹⁾, 올해는 응모자가 많지 않아 공모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통일아카데미, 통일포럼, 전국 대학생통일 토론대회, 대학생 통일동아리 지원 등이 있다. 통일아카데미의 경우 매해 3-4개 대학교가 선정되었고 한 학교당 700만 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통일아카데미 운영은 대부분의 학교는 2회 또는 3회의 강연 또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되고, 주제는 정치·정책·군사로 한정되어 있다. 적은 예산으로 통일아카데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포함하

40)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검색일자: 2016.12.4).

41) 신재표. “대학 통일교육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교양교육학회학술대회 자료집』 (2015년 11월), p. 113.

여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통일교육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일포럼은 남북관계, 북한실상, 통일미래, 통일준비 등의 주제로 포럼 또는 세미나, 통일콘서트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에는 지원 예산이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업인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회와 대학생 통일동아리 지원 대학의 숫자가 증가되어 통일포럼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통일포럼은 학생의 참여보다 교수, 전문가 중심의 세미나로 진행되고, 주제도 정책·정치·군사·외교·통일방안 등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가 어렵고, 사회과학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부터 처음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통일동아리는 2015년도에는 전국 대학 8개 동아리에 150-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에는 충분치 않은 금액이라 재정적 지원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통일의식의 변화와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의 지속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위탁사업은 매년 공모 형식으로 심사 및 지원이 진행되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의 지속성이 부족한 편이다.

IV.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1.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기회확대

최근 대학 통일교육 강화하기 위해 방안으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의무교육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교육

을 확산시키려는 논의들도 있다.⁴²⁾ 이는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 20년 동안 전국의 모든 대학에 『국민윤리』 과목이 일괄적으로 개설되고 대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대학 통일교육의 의무화는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온다는 결과는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학 통일교육의 의무화 교육은 『고등교육법』을 비롯하여 『통일교육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거 『국민윤리』 과목이 개설되었던 시기에 반공교육과 같이 권위주의 정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이념교육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⁴³⁾ 그리고 대학 통일교육의 의무화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의 침해 우려⁴⁴⁾와 학생들의 거부 등 획일적으로 강요하기에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이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해소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 속에 최근에 통일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하도록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할 바 있다. 지난 2015년 4월 28일 정부는 통일교육 의무화의 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⁴⁵⁾ 현재 대학

42) 안완기, “통일교육의 현황 분석과 내실화 방안 연구: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3집 (2004), pp. 231~232; 고경민, “통일교육 의무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23집 3호 (2015), pp. 167~193; 한관수·차태웅, “대학생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78호 (2016), pp. 158~159.

43)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p. 54.

44) 헌법 제31조 3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31조 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핵심 덕목인 것이다.

통일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의 의무화가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대학의 자율적인 재량 하에 교과목의 다양화와 확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통일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존의 한정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교육이 행해지는 현행 대학 내의 교과과정을 구조적으로 보완 및 강화하여 보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의 확대를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남북관계나 통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과목의 양적 확대를 통해 수강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통일 관련 정치외교학과, 윤리교육과, 북한학과, 군사학과, 국제관계학과 등에서 전공필수 및 선택 과목의 심화과정을 통해 심층적 전공과목 개설을 하여 보다 더 특화할 필요가 있다.⁴⁵⁾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전공학문 분야의 확대를 통하여 전 단과대의 전공필수 과목들에 북한·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 특화된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문학과에서 해방 후 문학사에 ‘북한 문학’을 포함할 수 있고, 음악대학에서는 ‘통일 음악’, 공대에서는 ‘통일 공학’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전공 중심에서 벗어나 학제적 접근을 통한 통일과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된 ‘융합형’ 교과목으로, ‘통일과 환경’ ‘통일과 생명과학’, ‘통일 경영론’ 및 미술, 음악, 영화 등에서 ‘통일 문화예술론’을 개설할 수 있다. 또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협력하는

45) 『연합뉴스』, 2015년 4월 28일. 통일부는 “별도의 지원 없이 권장을 의무화 할 경우 교육수요에 따른 대학의 자율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별도의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는 한 법률개정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46)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2014) p. 185.

‘한반도 환경변화’, ‘한반도 생태계’ 혹은 ‘한반도 토양을 고려한 특화 농작물 연구’ 등의 교과목도 가능하다. 이전의 북한·통일관련 전공학과에서 다루졌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의 분야의 주제에서 벗어나 전공분야가 확대되어 문학, 법학, 의학, 공학, 예술 등의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문제의 접근을 할 수 있다.

또한 전공 교과목 외에 교양선택 교과목의 다양화를 통해 비전공자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학생들보다 앞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북한 및 통일 연구와 전공 교과목과 교양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론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수 인력의 배출 제도와 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해마다 전국 대학에서 통일·북한 전공과 관련된 많은 박사가 배출되고 있고, 이들이 통일과 북한에 관한 연구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육위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위원과정’은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 2(통일교육전문강사의 양성)의 규정에 따라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과정으로, 통일정책, 북한에 관한 전문지식, 국제환경 등의 영역의 강좌와 교수법을 교육받고,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의 강사로 파견하고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전공 박사들을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고, ‘통일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전국 각 대학에 북한 및 통일 관련 강사로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내용의 변화: 균형적 관점과 사람통합 중심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목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를 통

해 많은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내용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대학 내 통일교육의 현황에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북한과 통일문제에서 구조와 체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통일은 체제통합의 문제로 인식한 결과 통일교육에서 남북한 체제의 특성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적실성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통일 관련 강의는 북한의 이념체제, 권력구조, 체제 특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해 왔으며, 통일문제에서는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정치외교학과나 북한학과 모두 정치학자 중심으로 전공이 개설된 학과이다 보니 북한 정치나 체제 문제 등이 중심이고, 국제관계학과는 국제정치와 관련된 전공 교과목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반면 경제를 다루는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나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문화를 다루는 교과목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북한·통일관련 교양과목의 대부분인 『북한의 이해』, 『북한사회의 이해』, 『북한학』, 『북한연구』 등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강의 목표를 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북한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강의에 담고 있다. 그러나 세부 강의 내용은 교양과목을 책임지고 있는 학과와 담당교수의 전공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이 달라지고, 편향적인 강의를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정치학과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면 북한 정치, 남북관계에 치우치고, 군사학과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면 대부분이 군사 중심이고,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면 북한 사회의 특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이해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이 편향된 관점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위주로 한 포괄적인 것이어서, 학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과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 이해하지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강의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⁴⁷⁾

지금까지 대학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일상생활과 사람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교육되어 왔다. 특히 대학 내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북한 사회의 현실이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심과 흥미가 높다. 대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야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성과 현실적인 수준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에서는 “분단으로 인하여 나에게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 “통일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통일을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활용하여 통일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은 단순한 제도적 통합을 넘어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관점에 입각해야 하며, 통일과정 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 간 통합과정 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태도를 함양시키는 역

47) 박광득, “통일교육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전략』, 제14권 1호 (2014), p. 132.

할을 해야 한다.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사람’이며, ‘사람들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의 체제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 사람, 생활세계(일상생활)의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같은 현장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가능하며,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 측면에서 동질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균형적인 통일의식을 함양을 위해 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치에 편중되지 않은 평화로운 삶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더해 통일과정에서 사회 전체와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조화와 평화롭게 살아가기’와 ‘사람통합’에 관한 학생 개개인의 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활용

현재 대부분의 대학 통일교육의 교육방법은 강의식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이 흥미 있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통일교육의 목적인 실천능력 향상에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의 확산을 위해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먼저 팀티칭,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통일교육은 기존 강의식 교육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세미나의 경우에는 각 대학들이 강의실 내부에서만 이뤄지던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대학생들

이 통일문제에 식견이 높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과 결합한다면, 대학생들의 통일인식을 제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 언론인, 정치가 등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특강 강사로 참여하고, 특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오두산 통일전망대 및 도라산역을 방문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결합시키는 방법 등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연구·토론식 교육을 적극 도입해 학생들이 통일 관련 내용에 대해 머리로 생각하고 공감하는 ‘자기주도형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에게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우리 사회와 국가에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찾고, 통일 이후에 겪게 될 갈등 및 어려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필요한 논리와 주장, 대응책을 자기 주도로 익히고 체득하게 하는 교육방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라서 그 특성에 맞게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학습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의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통일에 대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고, 학생들의 참여수업, 체험학습, 분단지역 현장학습 등 실습형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이론교육과 실천학습을 병행한 ‘융합교육’을 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세대에 맞게 영화, 드라마, 예술,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 방법이나 북한 이탈 주민의 초청 강연이나 생생한 대답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현실감을 부여하는 통일교육도 포함할 수 있다. 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험학습은 사회 참여능력 향상과 학습

자의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사회구성원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큰 편이다. 따라서 현장을 통해 몸으로 느끼는 현장체험의 교육은 효과적이다.⁴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통해 동기를 자극하고 유도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를 개인의 삶 속에서 조망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교육 관련 단체들은 현장체험 프로그램들을 시행해 왔으며, 그 예로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통일교육문화원의 휴전선, 6·25전쟁 전적지 답사, 국립현충원 참배, 평화통일대행진, 대학생 국토순례대회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도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현장탐방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 분단 현실과 관련된 판문점,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관, 남북출입사무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견학, 하나원 방문, 탈북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등의 현장체험 학습을 통일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한 현장체험식 진행보다는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하고, 현장체험과 토론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4. 법적·제도적 지원의 확립

현재 대학생은 학교 통일교육이나 사회 통일교육 영역에서도 교육대상으로 명확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에서 대학생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⁴⁸⁾ 이지연, “대학 교양수업의 현장체험학습 활용방안: 통일의식 재고를 위한 현장 체험학습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5호 (2013), pp. 495~496.

대학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근거로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⁹⁾ 3항은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대학도 진흥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대학생도 학교 통일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 위상을 명백히 확립하고, 통일교육 진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부 통일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학교 통일교육의 경우는 통일부와 교육부 협업체계가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미래 통일 한국의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 진흥의 책임과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구체적인 역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의 주체로서 통일부가 중심이 되고 교육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가 대학들의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지원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 확대 및 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부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4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 93.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통일교육 자체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다. 대학이 홀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개발, 북한·통일 관련 강좌 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각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적 지원이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북한 및 통일교육 교과목에 인증제 또는 수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봉사활동’의 인증제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이다. 그렇다면 대학 통일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대학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인증제’나 ‘수료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 4년 동안 북한 및 통일교육 교과목의 이수학점과 이수기준을 정해놓고, 그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인증서나 수료증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 때 반드시 현장탐방인 체험학습을 필수로 이수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및 통일 관련 인증제이나 수료한 학생들이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또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 상호간 경쟁을 유도하고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통일교육도 대학 자율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통일교육 강화 취지에 부응하는 대학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대학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도 유용할 것이다.

현재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 지원 사업은 비교적 단순하고 예산 규모도 작은 편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위탁사업의 예산은 약 1억 3천만 원으로 재정적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참가자도 전국 대학의 소수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여러 학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제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부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와 관심에 부합되는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중요하다. 다양한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급 규모의 확대, 장학금 및 해외연수 지원, 수상 경력의 활용 등 현실적인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남북한 분단구조는 더욱 고착화되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점점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통일의지도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대인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당위적인 인식보다는 현실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학 통일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곧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인식을 증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대학 통일교육은 한정된 소수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 교양강좌 개설 현황이나 강좌수는 많지 않고, 인문·사회과학대학 중심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심 있는 일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 확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마저도 교육내용이나 교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단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교육 교수법이 대부분 강의식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와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천능력 제고에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회 통일교육에서도 교육 대상으로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대학 통일교육의 위상 또한 상당히 미약하고,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통일부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이 단순하고 예산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성과 내실화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대학 통일교육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 내의 교과과정을 구조적으로 보완 및 강화하여 보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 확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목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수강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내용의 변화도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통해 구체성과 현실적인 수준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 대학 통일교육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체제'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생활세계의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에서도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

해 볼 수 있는 현장탐방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통해 동기를 자극하고 유도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를 개인의 삶 속에서 조망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학 자체만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 개발, 북한·통일 관련 강좌 개설을 운영하는 것에는 구조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각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적 지원이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 통일교육 강화 취지에 부응하는 대학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재정적 인센티브와 대학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통일부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와 관심에 부합되는 다양하고 현실적 인센티브제 도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접수: 2016년 10월 31일 / 심사: 2016년 11월 1일 / 게재확정: 2016년 12월 10일

【참고문헌】

- 고경민. “통일교육 의무화와 대학 통일교육 개선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2015).
- 김중수.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5).
- 김 철. “대학의 이념과 21세기의 대학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1호 (2006).
- 김홍수.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학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실천 과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2호 (2000).
- 박광득. “통일교육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전략』, 제14권 1호 (2014).
- 변중현.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년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 승실평화통일연구원. 『대학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승실평화통일연구원, 2015).
- 신재표. “대학 통일교육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교양교육학회학술대회자료집』 (2015년 11월).
- 안완기. “통일교육의 현황 분석과 내실화 방안 연구: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3집 (2004).
- 이경태. “바림직한 대학통일교육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11집 3호 (2004).
-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2014).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1997).
- 이지연. “대학 교양수업의 현장체험학습 활용방안-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체험학습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5호 (2013).
- 정경환. “대학통일교육의 기본전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3권 제4호 (2013).
- 조은희. “대학생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광복70주년 통일교육이 미래다』 (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15).

- 차승주.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
신진연구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0).
- 한관수·차태웅. “대학생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78호 (2016).
- 홍용희. “대학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윤리문화연구』, 제8호 (2012)
- 통일부. 『201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6).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통일교육지침서: 일반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 _____ 『2015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 _____ 『2015년 통일교육운영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 _____ 『2016년 통일교육운영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 _____ 『2016년 통일교육지침서: 통합용』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 _____ 『2016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기타

『데일리 NK』, 『세계일보』, 『중앙일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홈페이지: <http://nkknology.korea.ac.kr/> (검색일자: 2016.12.1).

동국대 북한학과 홈페이지: <http://nk.dongguk.edu/> (검색일자: 2016.12.1).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홈페이지: <http://homepage.inje.ac.kr/~tongil/> (검색일자: 2016.12.1).

전국대학기획자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ucpa.or.kr/> (검색일자: 2016.12.4)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aurinu.or.kr/> (검색일자: 2016.12.4).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검색일자: 2016.12.3)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Bae, Young-A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through status of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and seeks to improve the way in order to strengthen and activate of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Recently, university students showed the lowest interest in unification. They is recognized as a more realistic necessity of unification. Because our society was neglecting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form a consensus unification,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a very important step to prepare for unification and foster future generations.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did not get the position and the weak phase. Therefore, it is expanding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many students through a quantitativ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curriculum in order to strengthen and activate the phase of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The content of education must change from the system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people, living world. In addition, to increase the stu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and should use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introduce a proactive administration, financial support and various incentives to operate autonomously university education programs and training content development, North Korea or unification opening lecture of university.

Key words: unification,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status, improvement direction, educational contents, instructional method, reinforcement.

배영애(Bae, Young-ae)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윤리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사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통일전략』, 2014), “김정은의 현지도 특성 연구”(『통일전략』, 2015) 등이 있다.